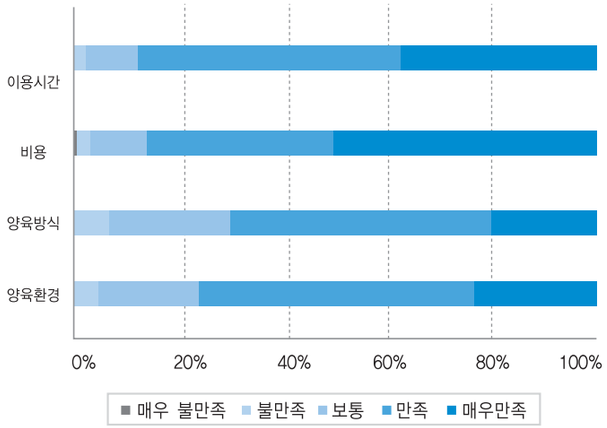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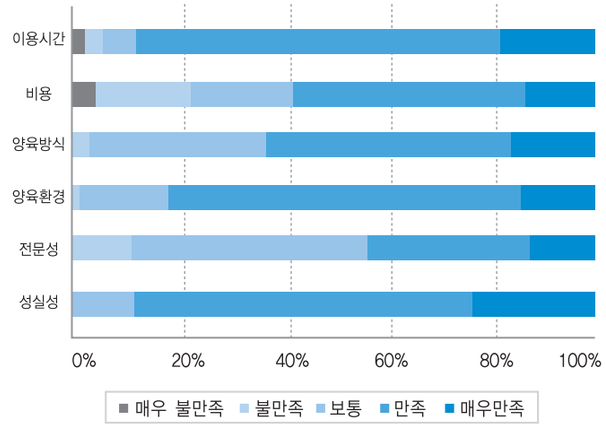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는 2004년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비용을 제외하고는 제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상승하여, 그간의 보육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노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만족도가 가장 증가한 항목은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영역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용자는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였고, 유치원은 비용에 대한 만족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용에 대한 만족정도는 낮은데, 이는 정부의 보육료, 교육비 지원예산의 확대와의 관련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그림 4] 영유아 혈연인 서비스 만족도



[그림 5] 영유아 비혈연인 서비스 만족도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는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중, 혈연인에 의한 보육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방식과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용이나 시간 만족도보다 낮은 편이다. 비혈연인 보육 만족도는 성실성, 이용시간, 양육환경, 양육방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용과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성과 비용이 정책과제가 됨을 나타냈다.

정리: **최혜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녹색성장 성공조건, 녹색인재 양성 영유아기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녹색성장' 이 정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비단, '녹색성장'은 한 국가의 일시적 정책홍보성 수준이 아닌 전 세계가 합심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프로젝트라 하겠다. 녹색성장이 거대담론 차원의 수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녹색성장이 산업혁명이나 IT혁명처럼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킨 녹색혁명이란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녹색인재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 녹색인재는 하루아침에 양성될 수 없다. 이 글은 영유아기부터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터 등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체화하면서 녹색인재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1. 녹색성장,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지난 100년(1912~2008)간 세계 평균기온은 0.74℃ 상승했고, 금세기말 최고 6.4℃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전 세계적으로 가뭄·홍수·폭염, 생태계 파괴 현상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 생태계 파괴 위기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다.

한편, 경제성장 및 신흥경제국 수요 증가로 지구공동체는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비 소비구조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사회·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와 새로운

1) 우리나라는 동일 기간 동안 평균기온이 1.7℃ 상승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선도해 나가고자 녹색변화(Green Conversion)를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채택하였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은 경제와 환경이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개념에서 출발한다. 경제성장이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발전이란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형평, 포용, 가치 등), 경제적(성장, 효율, 안정 등) 그리고 환경적 요소(자연자원 고갈, 오염 등)를 주요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상호 대립적이지 않게 윈(win)-윈(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합해 나가는 국가발전 전략이다.[2]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자원 효율화 기술, 환경오염 저감기술과 관련 융합기술 등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하여 경제·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녹색성장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녹색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양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세계는 녹색경주 중

지금 세계는 '녹색경주(Green Race)'[3] 한창이다. 녹색경주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녹색성장이란 용어를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4] 녹색성장 개념의 모태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5]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1983년 세계경제환경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Brundtland Commission)를 녹색경주의 출발로 볼 수 있겠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고 규정한 용어이다.

이후 1987년 국제연합(UN)의 '환경과 발전위원회(World Common Future)', 1992년 유엔이 주관한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회의에서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2002년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발전 세계대회(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가 달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2005년 서울에서 열린 5차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Fifth Ministerial Conference in Asia and Pacific)'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S)'가 채택되어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주요국들도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은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자원고갈 및 가격급등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진하고 있다.

오염생산국으로 오명을 갖고 있는 중국도 이러한 세계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재생가능에너지법'을 통해 건축물을 설계할 때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풍력자원 조사 및 풍력발전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제10차 국가계획(2001~2005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상용화기술 투자예산을 차세대 기술 투자예산의 무려 8.2배 수준(2,800만 달러)으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4년간 대체에너지 사용 차량을 생산하는 회사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세금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억 위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7년 현재 중국은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2위의 기업, 풍력터빈 분야에서 세계 7위의 기업(Goldwind)을 배출해 냈다. Suntech의 경우 2003년에 비해 2007년 매출액이 100배나 증가하는 등 고속성장을 이루기도 하였다.

〈표 1〉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대응전략

국가	주요 대응내용
EU	● 배출권거래제(EU-ETS) 도입 및 시행('05)·온실가스배출량을 '90년 대비 20% 감축('20) ●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EU기후변화 종합법(Directives)」발효('09.4)
영국	● 기후변화 전담 조직인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신설 ●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안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으로 명시('08.12)
미국	●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중 육성하여 저탄소에너지 보급 계획('09.1) ● 온실가스배출량 보고 규정(MRR) 도입('09년 예정) ● '2009 청정에너지와 안보' 법안(Waxman-Markey) 입법제안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추진 중
일본	●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해 「Cool Earth50」발표('07.5) ● 저탄소 사회달성을 위한 '후쿠다 비전' 선포('08)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5% 감축('20) ●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구체화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9).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3)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4) 녹색성장이란 용어는 Economist지(2000. 1. 27)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다보스 포럼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됨.
5) 권대봉 편저(2009). 녹색성장, 녹색직업, 녹색인재. 박영사.

3.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

가. 현 정부 환경정책의 기본원칙[6]

현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2(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의 수립 등)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3(중기계획의 내용 등)에 근거하여 '제4차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간의 실천계획으로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분야별 환경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관계부처 환경정책과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환경종합계획이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범위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민간사업', '시책사업과 투자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이 계획은 환경보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소관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국가 환경정책의 지침이다.

환경부(2008)가 발표한 현 정부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균형유지이다. 자연 없이는 인간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인간은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용량의 범위 내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 친화적인 경제발전이다.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 폐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환경을 고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것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경제발전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적 형평성 추구이다. 환경자원으로 인한 혜택을 세대 내, 세대 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환경적 기회 형평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국민참여 확대이다.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추진 경과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년 기념사를 통해 향후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2008년은 '저탄소 사회로 가는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이어서 2009년 1월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입법예고되었다. 지난 2월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6월에는 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설립되었다.

녹색성장계획의 근간이 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2009년 2월에 제정되었다. 녹색성장의 목표와 전략 아래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등을 통합·조정하여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특히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책 기본 법안을 흡수·통합하며,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기본 골격은 총 6장 제64조항으로 각 장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9).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Ⅰ) 새로운발전 패러다임.

〈표 2〉 추진 경과

기간	주요 추진 내용
2008. 8.	● 건국 60년 기념사에서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8.15)
2008. 9.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 기본계획 수립
2009. 1.	●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 수립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공포 ●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 녹색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2009. 2.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 확정 ● 녹색성장위원회 정식 출범 및 1차 위원회 개최
2009.3~6.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09~' 13) 수립
2010. 6	●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설립 - 녹색성장 체계화, 녹색성장 모델 글로벌 전파, 개도국 녹색성장 계획수립 지원 등 총 3개 사업 영역 사업 추진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다. 국가 전략 수립: 녹색성장 10대 정책 방향과 50대 실천과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녹색성장추진 5개년 계획(2009년~2013년)은 총 107조원을 투자해 약 182~20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목표로 2010년 녹색성장 국가사업 추진을 통한 성장 인프라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3년에는 녹색기술 산업 수출 증대,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2020년에는 녹색성장 7대 선도국가로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선진국으로서 동아시아 후발국을 지원하고 녹색성장 선도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최종적으로 2050년에는 세계 5대 녹색 선진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

녹색성장 국가발전전략을 구성하는 3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지급'은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이다. 둘째, '신성장 동력 창출'은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 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사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기반 조성이다. 셋째,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전략은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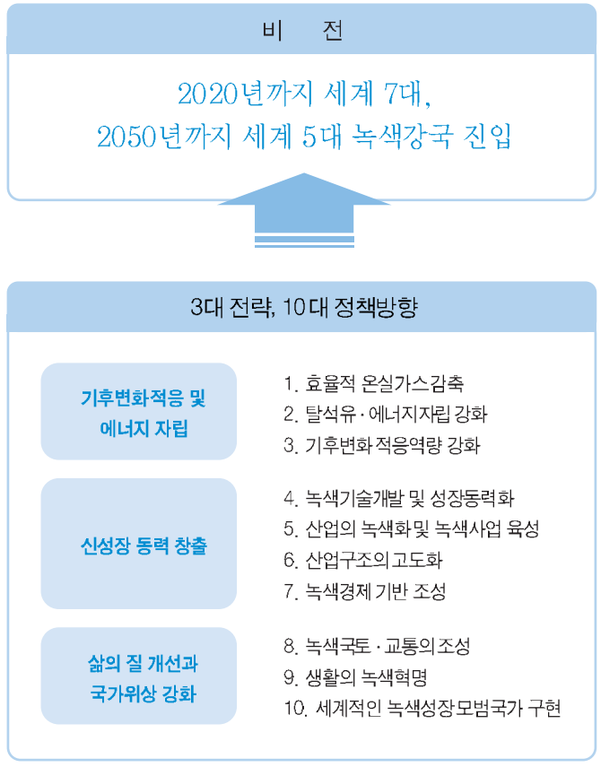
국가의 구현이다.

3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10대 정책방향으로 ①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②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③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④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육성 ⑥산업구조의 고도화, ⑦녹색경제 기반 조성, ⑧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⑨생활의 녹색혁명, ⑩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의 구현 등이 제시되어 있다(그림 1 참조).[7]

라. 추진체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동법 제3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8]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9]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10]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11]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녹색성장정책의 시행 주체로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을 〈표 3〉과 같이 조직하였다. 중앙의 대표적인 행정조직이 '녹색성장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위원은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조직할 수 있다.[12]



[그림 1] 녹색성장 비전체계(녹색성장위원회, 2009)

지방의 행정조직도 유사하게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시·도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각 부처 및 광역지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해 「중앙추진계획」과 「지방추진계획」을 매년 작성하며 부문별 계획은 사전에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 녹색성장의 성공조건

가. 궁극적으로 녹색인재를 길러야 한다

녹색성장은 고유가와 기후변화의 이중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과정이 역설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과정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원자력 에너지, 청정석탄, 친환경 자동차, LED 전구, 바이오신약, 소프트웨어, 디

〈표 3〉 중앙 및 지방 행정조직의 업무 및 구성 기관

구분	중앙	지방
조직	● 녹색성장위원회, 정부 각 부처로 구성(녹색성장책임관 지정[13]) - 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직속): 녹색성장전략 및 정책방향 결정 - 정부 각 부처: 녹색성장 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	● 지방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지자체협의회 구성 및 녹색성장기획관 지정 -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광역 지자체별 학계·경제계·시민단체·문화계 등 대표로 구성 - 녹색성장지자체협의회: 지방녹색성장위원장이 참여(분기 1회 운영)
업무	● 중앙행정조직은 녹색성장 컨트럴타워(control tower) 기능을수행하여, 정책실행·집행을 위한 역할분담 및 협의기구총괄 운영	● 지역 차원의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녹색성장 대책 추진 장애물 해소 및 의견수렴 통로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7)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8) 동법 제4조 제1항
9) 동법 제4조 제2항
10) 동법 제5조 제1항
11) 동법 제5조 제2항, 제4항
12) 동법 제14조 제2항, 제4항
13) 동법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자인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녹색성장이 성공하면 할수록 높아진 에너지 효율성이 경제 확장에 기여해서 결국은 더 많은 에너지 소비와 더 많은 탄소배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논리다. 즉,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및 사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최종적으로 환경에 부담이 증가된다면 환경오염 비용과 환경훼손의 절대량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14]

녹색성장이 탄소저감기술이나 재생에너지 기술, 대체에너지 기술과 같은 녹색기술에 기반한 경제성장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가 환경과 공생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는 대안적인 발전모델이라고 볼 때, 녹색성장사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사람, 인적자원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한 UN의 Agenda 21에서도 시민의식, 훈련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임을 천명하고 있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식, 가치, 행동, 삶의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표 4 참조).[15]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의 발전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녹색성장이 녹색혁명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녹색성장의 철학을 내면화하고 녹색소비와 생산을 창출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성장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녹색인재는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실천하는 주체적인 녹색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일상의 생활 속에서 녹색생활을 지속적인 경험하면서 비로소 가능하다.

〈 표 4 〉 녹색인재양성의 패러다임

구분	구 패러다임	녹색인재양성 패러다임
사회발전의 이념	경제성장 우선	환경-사회-경제성장의통합적 접근
사회발전의 시제	현재 중심	현재와 미래의균형적 시각
교육시스템	청소년기 중심의 교육	전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시스템
교육내용	분절된 지식과 교육	통합·융합적 지식
교육방법	반복-정형화-암기 중심	창의적-문제해결형-융합형
교육프로그램	획일화(소품종 다량)	다양화(다품종 소량)
교육서비스 시스템	공급자 위주의 분절형	수요자 중심의통합형
지역적 맥락	국지적-국내적 맥락	글로벌 맥락
환경교육	환경에 관한 지식과 기술	환경친화적마인드과 인식

자료: 권대봉(2009), 녹색성장, 녹색직업, 녹색인재

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여성이 만드는 녹색성장시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
15) 권대봉 편저(2009), 녹색성장, 녹색직업, 녹색인재, 박영사.

나. 녹색생활을 체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녹색성장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에 관한 관점은 어떤 다른 경우보다 인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OECD가 규정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가 개인에게 통합 또는 체화되어 개인적·사회적·경제적 복지창출을 촉진하는 지식, 기술능력 및 속성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이 인적자원은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 속에서 체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인적자원이란 지식, 기술뿐 아니라 자질과 태도, 품성이 다면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고, 특정한 개인이나 개별집단을 포함해서 조직이나 사회의 집합된 속성으로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권대봉, 2009).

녹색인재양성의 개념을 뿌리-줄기-가지와 열매로 구성된 녹색인재나무라는 '나무 메타포(metaphor)'로 설명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녹색인재의 뿌리부분은 사회전체 구성원의 녹색역량에 관한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환경 친화적인 태도와 인식, 행동, 그리고 사회와 환경, 미래에 관한 관심과 존경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나무 기둥 부분인 청소년기의 녹색인재이다. 미래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인재는 바로 현재의 청소년세대이다.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다양한 방면의 재능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녹색성장,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인력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술 등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재가 바로 이 녹색기술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나무가 그러하듯, 뿌리, 줄기, 그리고 가지와 열매들 간에는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각 부분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게 되며, 나무와 나무를 둘러싼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녹색인재 나무를 지속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은 새로운 문제해결력을 찾아가는 창의성과 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지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융합적인 능력이다.[16]

녹색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튼튼한 뿌리에 있다. 녹색인적자원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려면 어떠한 노력을 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상상어린이공원'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은 서울시가 2008년부터 2년 동안 300개소 '상상어린이공원'을 개소하겠다는 목표 하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

16) 권대봉 편저(2009), 녹색성장, 녹색직업, 녹색인재, 박영사.

젝트이다.[17] 2010년 현재 200개 '상상어린이공원'이 개소되었다. 그런데 2010년 개소한 몇몇 '상상어린이공원'에는 게임형 자가발전 놀이대, 태양열 그늘막, 태양열 집열판 등을 설치하여 낮 동안 모아졌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해가 진 뒤에도 은은한 불빛이 들어와 여름철 인근 어린이들의 놀이 및 주민들의 야간 휴식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18] 또 공원 내에 태양열 그늘막 내부 표시계를 설치하여 낮동안의 태양열에 의해 연월일,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처럼 태양열을 이용한 야간조명 활용,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 수 있는 태양열 그늘막 표시계(태양광 파고라), 게임형 자가발전 자전거 놀이대(Speed Racer) 등 에너지 관련시설이 놀이기구와 접목하여 설계됨에 따라 아이들은 재미있게 뛰놀면서 자연스럽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일상 생활 속에서 교과방식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비형식적인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화하는 교육이야말로 앞의 〈표 5〉에서 소개한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형적인 사례라 하겠다.

5. 결론을 대신하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녹색화

요즘 아이들이 가정 못지않게 오랜 시간 지내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야말로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하겠다. 이미 상급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낙후된 학교교육의 환경개선을 친환경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차원에서 녹색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그 대상을 영유아들이 많은 시간 보내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확대되어야 하며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대목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녹색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미국의 민간단체인 Green School Initiative가 운영하고 있는 'Green School' 인증제를 제안한다. 'Green School'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하고(toxic free),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방안을 활용하고(use resources sustainably), 녹색운동장을 만들며(green schoolyard), 환경과 관련한 책무성을 가르치는(teach stewardship) 4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1]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녹색어린이집, 녹색유치원을 짓고자 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녹색화를 촉진하여야 하겠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6항을 보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녹색건축물이 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영유아들에게 환경교육을 경험케 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녹색화'야 말로, 앞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하겠다.

[그림 2] 은평구 박석 상상어린이공원[19]과(왼쪽, 가운데) 관악구 새싹 상상어린이공원[20](오른쪽)

17) '상상어린이공원' 추진 목적은 단조롭고 노후화되어 그동안 외면 받아오던 기존 어린이공원(놀이터)를 어린이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테마놀이 공간,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쉼터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 2년 간이며 25개 자치구의 노후 어린이공원 300개소('09년 150개소, '10년 150개소)를 대상으로 총 147,188백만원(시비 100,066/ 구비 47,119)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18)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보도자료(2010. 5. 4). 5월 상상어린이공원 50개소 개원.

19) 태양열 집열판과 LED 등이 있어 밤에도 은은한 불빛이 비추는 벌집형 징글짐 조합놀이대와 낮 동안의 태양열에 의해 연월일,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이 나타나는 태양열 그늘막 내부 표시계

20) 조합놀이대 상부 태양열집열판을 통해 LED등 조명, 경사형 회전놀이대, 유아용 모래놀이대, 유아용 조합놀이대 등 설치

21) 권대봉 편저(2009), 녹색성장, 녹색직업, 녹색인재, 박영사.